

CONTENTS

한반도 동향

2021년 11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소실 연구위원

작성 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북한연구소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소실 연구원

김소연 평화연구소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소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소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일차 불사용' 논쟁 동향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사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핵무기 사용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이것을 '일차 사용' 원칙이라고 함...

미국

How Not to Dismantle an Atomic Bomb: A Realistic Approach for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RAND Corporation](#)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결정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것...

중국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단지 "상징성"만을 가져서는 안 돼 [환구시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

일본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강해지는 북중관계 [환태평양비즈니스정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폐쇄로 북한의 무역이 급감하고 경제가 악화됨...

러시아

김정은주의: 북한의 "모든 것의 주인"에 관하여 [Valdai Discussion Club](#)

2021년 10월 여러 출처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새로운 정치적 용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부 노동당 행사의 양상이 변화하였음이 확인됨...

북한

김정은-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11월 19일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김정은 총비서가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 보낸 서한 전문을 게재함...

I

주요 정세

11.1.(월)

한중 북핵수석대표 화상협의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중국,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관련 건설적 역할 원해”

11.2.(화)

미국, 중국 및 러시아에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촉구”

중국, “(지난 29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관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에 도움” (대변인 브리핑)

11.4.(목)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체제 전념... 북한은 도발 삼가고 대화 나서야”(대변인 브리핑)

11.5.(금)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리룽남 주중 북한대사 회동 “북중협력 논의”

11.8.(월)

통일부, “(북한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훈련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대변인 브리핑)

11.11.(목)

정의용 외교부 장관,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국과 상당한 조율 끝났다”

정 장관, “한미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11.12.(금)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미대화 재개 관련) 공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 중”

11.16.(화)

한미 외교차관 회담, “종전선언 등 북한 대화건인 방안 지속 협의”(워싱턴 D.C.)

11.17.(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종전선언 관련) 한국, 일본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공동기자회견 불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만 단독회견으로 진행

11.18.(목)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한국,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

11.20.(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한일 외교당국 간에 대화나 협의단절 없다. 원칙 지키며 협의 지속”

11.22.(월)

통일부, “북중 국경개방 준비 마무리 단계... 아직 해제는 아니다”(대변인 브리핑)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종전선언, 중국과 상의해서 해야”(YTN 뉴스)
싱 대사, “올림픽에서 종전선언하는 것은 남북합의에 달려... 우리로서는 개방적”

11.24.(수)

2021 세계영양보고서(2021 Global Nutrition Report), “북한 아동 발육 부진·저체중 상황 개선 추세”
각국 정부, 유엔,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발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종전선언, 중국 올림픽 겨냥 아냐... 불가분관계로 연결 말라”(기자간담회)
이 장관, “베이징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 받는 것 아니다”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김정은 위원장의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강화, 대화의 3중주**
(박종철, 『정세와 정책』, 제40호, 세종연구소, 2021.11.1.)

-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9월 30일), 당창건 76돌 기념연설(10월 10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10월 11일)에 이르기까지 연설정치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
 - 3개 연설은 국내정책, 국방력 강화, 대남·대외의 3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설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각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 자위력 강화, 조건부 대화론의 3중전략을 제시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역점을 두고, 당창건 기념일 연설에서는 인민대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간부들의 적극적 활동을 독려함.
 - 국방발전전람회연설은 국방력강화의 정당화를 위한 명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시정연설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조건부이지만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중적 태도 및 적대시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공을 남측으로 넘겼음.
-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비핵화협상과 함께 군비통제에 대한 군사회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회담의 3차원에서 남북대화를 모색해야 함.
 -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 채택, 인도적 협력 제공,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중국도 북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

※ 원문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2&itm=&txt=&pg=1&seq=6155>

■ 2021년 10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

(고재홍, 『Issue Brief』, 제30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1.2.)

- 북한은 2021년 10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개발 및 생산한 신형무기들을 전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함.
 - 북한이 ‘전람회’라는 형태로 군사력을 과시한 것은 처음임,
- 북한은 이 전람회를 열병식의 효과를 가지는 당 창건 7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 대북제재, 자연재해라는 3중고 하에서 군 사기진작 및 내부결속 강화, 미미한 경제성과를 대신하는 국방력 성과 과시 무대의 필요성, 한미와의 관계개선과 무관하게 북한 국방정책의 지속추진 의지 표명이 개최 배경일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람회 개막연설을 통해 한미와의 대화 조건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이중기준’ 및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재확인함.
 - 북한은 전람회에 전시되어있던 소형SLBM을 10월 19일 시험 발사함.
 - 향후에도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서 신형 무기들의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167&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일차 불사용’ 논쟁 동향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전봉근, 『IFANS FOCUS』, IF 2021-21K, Nov.9, 202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11.9.)

-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핵무기 사용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이것을 ‘일차 사용’ 원칙이라고 함.
-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핵무기 반감이 커지자, 미국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사용방안 축소를 검토함.
 - 미국 민주당 정부가 요구하는 ‘일차 불사용’ 원칙은 말 그대로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핵무기를 일차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교리임.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무기 사용을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보복하는 데 한정하는 ‘유일 목적’ 원칙을 도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옴.

- 한국은 미국 안보전략과 동맹전략, 특히 핵전략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책을 협의해야 함.
 - 더불어, 국내에서도 핵전략에 특화된 전문가가 필요함.
 - 한반도 또는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전략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북아 전략대화가 시급함.

※ 원문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870&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1.2.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168&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11.4.	적정 가치평가와 합리적 제안: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실험	봉영식	EAI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85&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keyword_option=&keyword=&more=
1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6189
11.15.	북한 의료산업 동향 및 전망	김혜진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11.25.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최현숙	EAI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91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keyword_option=&keyword=&more=
11.26.	2018년 이후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과 전망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201&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11.29.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략적 선택 구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작동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웅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7권 4호, pp. 157~182.

2. 미국

■ Joe Biden Must Change His North Korea Policy

(Daniel L. Davis, *The National Interest*, 2021.11.10.)

-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종전선언의 추진을 재차 촉구했으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명심해야 할 점은, (1) 김정은은 미국이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2)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상관없이 북한을 무기한 저지할 것이라는 점임.
-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불필요한 전쟁을 예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함.
 -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 미국의 조치와 관계없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독단적인 생각은 미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임.
 -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이 관여(engagement)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음.
 -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북한의 체제를 전멸할 핵 보복을 불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바이든 행정부는 불필요한 전쟁을 예방하고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주요 정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음.
 - 재래식 및 핵전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며, 강경하면서도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외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함.
- 외교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방법은 다양함.
 -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하는데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목표는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해 진보하는 것”이라는 실용적인 입장을 피력함.

- 종전선언은 평화조약과 다르고, '상징성'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상징적인 종전의 행위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고 남북한을 문화적·경제적으로 연결할 기회라고 믿으며, 이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간 대화와 관련 직접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음.
- 북한은 틀림없이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
 - 제재는 목표하는 국가의 행위 조정에 있는데, 행위에 변화가 없다면 성공한 제재라고 볼 수 없음.
 -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때 목표 국가의 행위가 변화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joe-biden-must-change-his-north-korea-policy-195982>

■ How Not to Dismantle an Atomic Bomb: A Realistic Approach for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avid A. Shlapak, RAND Corporation, 2021.11.05.)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결정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것
 -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호는 새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관리에 대한 전임자의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함.
-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북한이 가하는 핵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님.
 - 오바마 행정부의 전무(nothing-for-nothing) 방식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부 아니면 전부(all-or-nothing) 방식과 같이 안보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협상 전략은 거의 확실하게 실패할 것
- 대북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희망이며, 중국이 개입하여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도 멈춰야 함.
 - 중국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환영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중국은 중국 영토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 영토 사이의 중요한 지리를 점유하고 있는 우호적인 완충 국가의 붕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

- 오바마 행정부의 전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 방식 사이의 중간 지점이 답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 경제, 특히 농업 부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입증된 일부 제재 요소를 해제하는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북핵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요소는 유지하는 것
 -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핵심 핵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상대방의 현재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작고 점진적인 무언가를 위한 거래는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희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경색된 관계를 벗어나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
 -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현재 접근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무장한 북한을 관리하는 매우 실제적인 전략적 도전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 뿐임.
 -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에 접근해야만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핵 야망이 과도하게 불안정해지지 않고 종전선언 이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원문 <https://doi.org/10.7249/PEA1495-1>

■ End-of-Korean-War Declaration C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Alliance Security

(Bruce Klingner, *Heritage Foundation*, 2021.11.13.)

- 한국은 미국의 저항과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집권이 몇 달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문 대통령의 최근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추가 전제조건을 요구함.
- 한국 관리들은 종전 문서가 단지 상징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종전선언은 잘못된 안보 의식을 조성하여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계속해서 남한에 가하는 위협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함.
 -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다자 간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설부른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기분 좋은 제스처일 뿐일 것이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미국은 종전선언이 선제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으며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의 일부여야 함을 인식하고 계속 진행해야 함.
 -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평화 회담의 복잡성과 합의의 광범위한 전략적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휴전이 평화의 틀을 제공했지만,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강력한 주한미군의 주둔임.

※ 원문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end-korean-war-declaration-could-have-serious-consequences-alliance-security>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1.02.	North Korea Accuses U.S. of Double Standards on Nuclearization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accuses-us-double-standards-nuclearization-195748
11.03.	The Case for U.S.-Japan-ROK Cooperation on Democracy Support in the Indo-Pacific Region	Nicholas Szechenyi and Hannah Fodale	CSIS	https://www.csis.org/analysis/case-us-japan-rok-cooperation-democracy-support-indo-pacific-region
11.06.	Americans Underestimate the Danger in Continuing to Defend South Korea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americans-underestimate-danger-continuing-defend-south-korea-195847
11.10.	North Korea Intensifies War Against Foreign Influence	Martyn Williams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1/11/north-korea-intensifies-war-against-foreign-influence/
11.16.	Biden Raises Human Rights with China's Xi during Four Hour Meeting	Brett Samuels	<i>The Hill</i>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81682-biden-raises-human-rights-with-chinas-xi-during-four-hour-meeting
11.22.	North Korea Is Addressing the Pandemic in Its 'Style.' That Means Leaving a Lot of People Hungry.	Andrew Yeo	<i>The Washington Post</i>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1/11/17/north-korea-is-addressing-pandemic-its-style-that-means-leaving-lot-people-hungry/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1.22.	End Of Korean War Declaration: Why Just Words On Paper Won't Matter	David Maxwell	1945	https://www.19fortyfive.com/2021/11/end-of-korean-war-declaration-why-just-words-on-paper-wont-matter/?mc_cid=bdc4d1cd2b&mc_eid=2d6f5f3637
11.22.	North Korea Remains the Land of Bad Options: What to Do About Human Rights?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remains-land-bad-options-what-do-about-human-rights-196956
11.23.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Spurned by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Mitchell Blatt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former-president-chun-doo-hwan-spurned-korean-presidential-candidates-196997
11.24.	The North Korea-Iran Relationship: An Anti-American Alliance or Transactional Partnership?	Samuel Ramani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1/11/the-north-korea-iran-relationship-an-anti-american-alliance-or-transactional-partnership/

3. 중국

■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단지 “상징성”만을 가져서는 안 돼

(왕권성, 환구시보, 2021.11.05)

(王俊生, 半岛终战宣言不能只是“象征性”, 环球时报,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
 - 사실 종전선언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일환으로 새로운 이슈는 아님.
 - 1997년부터 6차례에 걸쳐 열린 4자회담 당시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고, 2005년 6자회담에서 서명한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무산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추진이 정체에 빠졌으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개선을 꾸준히 시도해왔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종전선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 중국은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당사자
 -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르면 1953년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의 공식 종료는 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유효
 - 6.25전쟁 당시 중국군이 20만명 가까이 희생되었고, 1953년 당시 GDP가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을 위해 각종 작전물자와 군자금으로 25억달러 상당을 소비
 - 따라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법적·정치적·도의적으로 어불성설이며, 북한·중국·미국·한국 4자가 참여해 정전협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함.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 종전선언 하나로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음.
 - 종전선언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북미 상호신뢰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돼야 함.
 - 올해 11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회담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과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여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aaBVSXwK8>

■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중국외교-중국 국제관계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인식

(장스쉘, 아태안보와해양연구, 2021. No.6.)

(江时学, 国际秩序、中美关系与中国外交——关于中国国际关系研究的若干认识, 亚太安全与海洋研究, 2021. No.6.)

-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는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도전에 직면하게 하였음.
 - 중국은 종합국력 강화와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국제질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였으나 국제사회에는 패권주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부활하고 냉전적 사고가 팽배
 - 이제 중국은 미중관계의 개선, 외교적 지위와 품격 향상,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의 제고뿐만 아니라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의 창설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
- 국내외 연구계는 미중관계가 군사적 충돌과 관계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전망하고 있고, 어느 쪽이든 미중 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부담은 막대함.
 -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억제책을 펴면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였으나, 양국은 각 분야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 전방위적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
 - 현재의 추세상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진 중인 ‘차보즈 프로젝트’(중국의 목을 조르는 핵심기술에 대한 제재)가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
 - 미중관계의 다음 단계가 충돌일지 개선일지는 미국의 고민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
- 중국 외교의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중국 국제관계 연구계에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
 - (도광양회)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도광양회 기초를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에 대한 왜곡적 이해로 인한 것, 도광양회가 무원칙적 양보, 유소작위는 맹목적인 강경함이 아니라 중국은 국익과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원칙하에 외교활동을 전개했음을 의미
 - (전랑외교) 중국의 전랑외교는 미국의 강경하고 일방적인 외교적 압박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미국 정부가 대국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소위 ‘전랑외교’를 펴지는 않을 것
 - (외교적 발언권 제고)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중대 현안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 소프트파워를 증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탈냉전시대에 그동안 통용되어 온 서구의 국제관계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국력지상주의나 제로섬게임과 같은 주장은 이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반면 시진핑의 외교이념은 세계가 직면한 증대한 문제를 타개하고 국제질서의 변혁을 선도하는 데 기여
- 시진핑 외교이념은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흐름의 통합, 민족정신과 국제주의의 통합, 중국적 품격과 국제정서의 통합 등을 보여줬으며,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는 시진핑의 외교이념을 기본으로 중국 외교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함.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YFZH202106001&uniplatform=NZKPT&v=t3RiP_wxP5UowNwnJ5sdZOwMZxsc5lh9jb52HbWhWk_xWMPtPRUfgXmKHY3yeZiu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Vol.49 No.6.	미국의 태평양 “도련” 전략의 수립과 그 영향 (美国太平洋“岛链”战略的构建及其当代影响)	인명명 (尹蒙蒙)	안후이사범대학 학보 (安徽师范大学学报)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AHSD202106007&uniplatform=NZKPT&v=lgwi_tc_eDE2VR0fYjbiGWwjY03s1Qylw0davicKl6NHxBvrNCDf-wqHtp_Tlo4W
2021. No.6.	동북아 신형지역질서 수립 : 한중일 협력의 진전과 전망 (东北亚新型地区秩序构建 : 中日韩合作的进展与前景)	진이원 (晋益文)	아태안보 해양연구 (亚太安全与海洋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YFZH202106006&uniplatform=NZKPT&v=t3RiP_wxP5VLYRijVQ6lo58iMDLCOx2cq1kvpnenCegB5VVA1jZWYrtRPIVjVCn
Vol.39 No.6.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입장 고찰 : 비전략군사전선 (拜登政府对华态势考察 : 非战略军事阵线)	스인홍 (时殷弘)	국제안보연구 (国际安全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GGXB202106002&uniplatform=NZKPT&v=8_18IQGqTMvun9BbKIXMYaxXDSj4Kec1ksldJ2aTEgvPWssuMbMilKm-HRjKVf1B
2021. No.6.	대국정치, 세력전이와 미중 리스크 관리 (大国政治、权力转移和美中风险管控)	루보빈 (陆伯彬) 왕웨이 (王玮)	아태안보 해양연구 (亚太安全与海洋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YFZH202106002&uniplatform=NZKPT&v=t3RiP_wxP5UeX_C_S952zAc0Zato4EjXxLMe0glfqCeaYFf_1C8Rvmr5bCdcnX8t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1. No.6.	중국 특색의 한반도문제 연구 이론체계 수립 논의 〈论构建中国特色朝鲜半岛 问题研究理论体系〉	파오젠이 (朴键一)	동북아학간 (东北亚学刊)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DBYX202106001&uniplatform=NZKPT&v=U4ACG2sb7KYdct6p7QOXgT5uHBjrp9V79zl71y2lefvg24K_oKhJS4PfyG5tbaPC
2021. No.6.	세계대변혁과 인류의 미래 〈世界大变局与人类的未来〉	천쑤광 (陈曙光)	구색 (求索)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QSZZ20211117001&uniplatform=NZKPT&v=Cb81F375CkUgvvLlyum6rW8zi_LfGNnQJy9MPYTnTLb7w-NG9_nnJmKX3uwP-T0N

4. 일본

■ 북한 ‘전술핵무기화’의 현단계: KN-23의 효과와 다양화

(쿠라타 히데야,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1.11.12.)

(倉田秀也, 「北朝鮮「戦術核兵器化」の現段階: KN-23の効用と多様化」, 2021.11.12.)

- 북한의 무기 개발은 한반도 내에서의 무력 충돌이 주한미군의 개입으로 확산(escalation)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
 - 2016~17년 미사일개발은 대도시를 목표로 넓은 범위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ICBM이 탄생
 - 2019년부터는 주한미군 사령부 등 좁은 범위를 정확히 명중하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변화
 - 북한은 냉전시기 스킵드계 단거리 미사일(화성)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주한미군 이전으로 사정거리가 긴 KN-02를 개발
 - 또한, 사정거리와 명중률이 고도화될수록 요격확률이 높아진다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변칙적인 궤도를 갖는 미사일을 개발
- KN-23의 모델이 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모델이나, KN-23이 핵탄두 탑재를 상정하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북한은 KN-23시리즈 개발과 관련하여 ‘화력타격’, ‘화력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
 - 2016년 제7차 당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좁은 범위를 대응하는 ‘전술핵’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8차 당대회에서도 ‘전술핵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KN-23은 향후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3월 25일 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600km의 미사일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철도기동미사일 역시 기존 화성-09와 유사한 비거리를 갖는 것으로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군사경계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주한미군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주일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확전 저지’ 전략의 방향성을 보임.
 - 단계 별로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계획은 파키스탄의 ‘비대칭 확전’ 전략과 유사
 - 향후 한미 미사일 방어계획은 북한의 전술핵에 대한 조기사용을 저지하고, 불규칙한 궤도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원문 <https://www.jiia.or.jp/column/korean-peninsula-fy2021-04.html>

■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강해지는 북중관계

(무코야마 히데히코, 환태평양비즈니스정보 Vol. 21, No. 83, 2021.11.15.)

(向山英彦, 「米中覇権競争下で強まる中朝関係」、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Vol. 21, No. 83, 2021.11.1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폐쇄로 북한의 무역이 급감하고 경제가 악화됨.
 - 자연재해로 인하여 곡물생산이 감소하여 식량부족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북한의 대외경제는 총 다섯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음.
 - 한국전쟁 이후 초반에는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였으나, 중소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화
 -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무역의 다각화를 지향
 - 1990년대는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이 대폭 축소되고, 일본과의 교역이 증가
 - 2000년대는 남북교역이 확대되어 한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증가
 - 2010년 이후에는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졌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90%에 달함.
 - 초기 북중무역은 북한이 부족한 물자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일방적 관계
 - 2000년대 이후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의 공동개발 추진 등 쌍방향적인 관계로 변화
- 트럼프정권 시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 전제가 깔려있음.
 - 중국에게도 북한의 비핵화는 공동의 목표임.
 - 중국은 북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은 한정적임.
 - 중국은 북한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제재를 실시하지 않으며, 북한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음.
 - 또한, 중국은 북한경제의 악화와 이에 따른 체제붕괴를 우려하므로, 국제사회의 과도한 경제제재에 반대하며, 비핵화에서 ‘대화’를 중시
 - 오히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더욱 강화됨.
- 북한은 향후 식량부족해결을 우선시하여, 자력갱생 노선을 유지할 것
 -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역시 국경이 개방되면 무역 및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원문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im/pdf/12968.pdf>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1.1.	미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교섭 프로세스 〈米国トランプ政権下における 北朝鮮の非核化交渉プロセス〉	테라바야시 유스케 (寺林裕介)	입법과 조사 (立法と調査) No. 440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1pdf/20211101083.pdf
11.25.	한국의 신규감염자수가 처음으로 4천명 이상. 일본과의 차이점은? 〈韓国の新規感染者数が 初の4000人超え。 日本とは何が違うのか?〉	김명중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p/kim_m/2021/11/4000_2.php

5. 러시아

■ 김정은주의: 북한의 “모든 것의 주인”에 관하여 (Кимченынизм: о «хозяине всех веще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안드레이 란코프, Valdai Discussion Club, 2021.11.11.)

- 2021년 10월 여러 출처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새로운 정치적 용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부 노동당 행사의 양상이 변화하였음이 확인됨.
 - 당 학습 등을 위한 대내 선전물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몇몇 행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제거된 채로 진행되었음.
 - 엄밀히 말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첫해부터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영원히 선대의 그늘에 머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식별된 바 있음.
- 북한의 조선 노동당은 창설 직후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이뤄진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이후 소련의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소련과 거리를 두는 교묘한 이념적-외교적 행보를 보임.
 -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스스로’ 또는 ‘자주성’을 뜻하는 ‘주체’의 개념이 북한 고유의 이데올로기로 선포되었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 사상을 통해 북한은 1960년대에 소련과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분되는 고유의 혁신적인 이데올로기를 공포할 수 있었음.
 - 1970년대엔 ‘김일성주의’라는 용어가 주체 사상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엔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너무 공개적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공식 문건에서 자주 사용되지 못하였음.
 -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김정일은 주체 사상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강조하면서 당의 공식 문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을 줄여나갔으며, 군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선군’ 사상을 제시하여 주체 사상을 독창적으로 보충하기도 함.
- 이제 김정은에게도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선대의 이념적 유산들과 구분하려 하고 있음.
 -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권력의 승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김정은의 집권은 김씨 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단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힘입은 것으로 주장되지만, 김정은이 겨우 28살의 나이에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서 그의 혈통이 작용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임.

- 이를 이해하고 있던 김정은 역시 집권 초반부엔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시대로 기억되는 김일성 집권기의 정책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과 김일성과의 외모 유사성을 지속해서 강조하였음.
-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은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선 당 규약의 전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이는 대대적인 개정도 이뤄짐.
-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명명할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김정은주의'는 '주체 사상'과 병행해서 사용될 것임.
 -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왕조와 같은 통치의 원칙에 익숙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국내정치적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임.
 - 하지만 이러한 통치 원칙은 현행 지도자가 전대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대의 영광을 잇는 끊임없는 연결고리 속에 위치하는 형태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원문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kimchenynizm-o-khozyaine-vsekh-veshchey/>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1.01.	그들이 적응하게 만들어라: 러-중 해상 합동훈련은 어떻게 일본과 미국을 공황에 빠뜨렸나 (Пускай привыкают: чем флотск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учения вызвали панику в Японии и США)	빅토르 리토프킨 (Виктор Литовкин)	타스 통신 (ТАСС)	https://tass.ru/opinions/12799411
11.09.	한국이 러시아에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Южная Корея попросила Россию помочь решить угрожающий экономике кризис)	올레그 키리아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1/11/09/korea-poprosila-rossiiu-pomoch-reshit-ugrozhaiushchij-e-konomike-krizis.html
11.16.	한국의 이단아와 “죽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аверик и «Бамбуковое копьё»)	올레그 파라모노프 (Олег Парамонов)	The International Affairs	https://interaffairs.ru/news/show/32445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11.1.~11.30.)

일자	대내	대남·대외
11.0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남도 평원군 남동리 700여 세대(단층·소층 산림집·관리위원회·문화회관·탁아소 건설) 산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 	
11.0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화학공업부문 발표회(~11/4,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 화상회의) 	
11.03.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평양시 1만세대 산림집 건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마감공사와 원림녹화를 높은 수준에서 할 것 강조 • 제16차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 토론회(~11/4, 함경남도인민병원) 	
11.0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들 사이·본보기협동농장들 사이의 '벼가을경기총화'(농근맹중앙위원회 주최,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12월) 비난(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민주주의 본질을 왜곡하여 세계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 있음." • [대일] 일본 군사비 증액시도 비난(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수행능력 강화로 이어질 군비증강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경계심과 적대감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
11.0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 영광군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낸 '감사' 전달모임 진행(영광군 상중협동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 등 참가 	
11.07.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천(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 총참모장), 각급 기계화 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경기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포병전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 훈련 정형을 검열평가하며 전군에 경쟁적인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목적" 	
11.09.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협의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꾼들의 책임·역할 △농업근로자 생산의욕 고취 △농기계 물질 기술적 보장대책 △다수확농민 경험 공유 문제 등 토의 • 평안북도 산림과학연구소 준공 • 집단체조창작단,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일자	대내	대남·대외
11.1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 신흥군 수해지역 새 살림집 입주 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미국은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 (외무성 홈페이지) - “미국 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총기류 및 인종차별, 증오범죄와 세계 도처에서 미군의 민간인 살육 만행들로 사상최악의 인권유린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설성”
11.13.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풍열성자회의, 각 도에서 진행 -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 •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11.14.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강원도 통천·송도원수산사업소 	
11.16.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현지지도] 삼시연시 3단계 건설사업 - 삼시연시 △건설공사정형 △도시경영실태 △농사 실태 전면적 요해 - 조용원(당 조직비서), 김덕훈(내각 총리), 박정천 (당 비서) △김재룡(조직지도부장) △박훈(내각부 총리) △건설부문 지도간부 등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독] 북한 불법 환적 감시활동 참여 비난(외무성 홈페이지) -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적대행위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긴장상태에 있는 열점지역에서 임의의 군사행동도 자칫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11.17.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11/19)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 각 단위들이 제출한 190여건 논문 심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축전]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시정운동 51주년’ 관련
11.18.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개막(~11/21) - 김정은 위원장 참가자들에게 서한 -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도·시·군 당위원회 및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등 참가 △(주석단) 최룡해, 김덕훈, 박정천, 리일환, 오수용, 태형철, 김재룡, 오일정, 허철만, 유진, 김영환 등 당정 간부들 및 책임일꾼들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건립(평안북도) 	
11.20.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인민소비품 전시회’ 진행 	
11.2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폐막 - “전국의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대북 인권결의 채택(11.17.)은 ‘反北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엄중한 주권침해행위’ 라고 전면 배격(외무성 대변인 담화)
11.24.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시정운동 51주년’ 관련 답전
11.25.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돌격대원들 쫓기모임 - [참가] 김재룡(노동당 정치국 위원), 박훈(내각부 총리), 김정성(당중앙위 부부장), 216사단 지휘 성원들과 돌격대원들, 군인건설자들 - [진행] 김재룡 보고 → 김상룡(216사단 참모장), 박창선(조선인민군 군관), 유철호(포태건설여단 황해남도연대 정치부장) 토론 	
11.28.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풍열성자회의 진행(평안북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등)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당면과업 (노동신문, 2021.11.4.)

- 11월 4일 노동신문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현 시기 노동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삼아 힘차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투쟁구호 아래 농촌 특유의 문화발전, 우리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려 한다고 기술
 -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한 농촌건설의 당면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들의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도록 균형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
 - 혁명의 시련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오늘날 농촌의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

■ 공산주의 그날까지 들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 (노동신문, 2021.11.15.)

- 11월 15일 노동신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 내용으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에서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노선이라고 설명
 -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3대혁명을 강하게 벌여야,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요구를 전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
 - 3대혁명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투쟁방식으로,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고 새것을 부지런히 창조하며 뒤떨어진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한다고 설명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1.16.)**

- 11월 16일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김정은 총비서가 삼지연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 답사숙영소, 증흥농장지구 등을 현지지도하고 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를 요해함. 그는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과 지방건설에 대한 방침적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 조형화, 예술화가 구현되었다고 높이 평가
 - “삼지연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라고 계속 강조했으며, 건설을 통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담보가 더욱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강조
 - 더불어 삼지연시의 생태환경과 산림상태에 대해 언급했는데, “병해충과 기온변화 등 각종 요인에 대비한 산림보호대책”을 세우고 과학기술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연구를 심화시킬 것을 피력함.

■ **김정은-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1.19.)**

- 11월 19일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김정은 총비서가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 보낸 서한 전문을 게재함.
 - 서한은 당이 3대혁명의 가치를 높이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
 -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은 본질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이며,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 정신”이고,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라는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시, 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당은 당정책관철을 조직집행하는 기본 단위인 시, 군 강화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3대혁명의 기치높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1.22.)

- 11월 22일 노동신문은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폐막식에서 채택된 호소문 전문을 게재함.
 - 호소문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약속이 끊어번지고 있으며, “투쟁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 안는것은 3대혁명만이 살길이고 흥하는 길이라는 철리”라고 주장
 -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힘차게 휘날릴수록 사회주의의 전진동력이 배가되고 3대혁명기수들의 대오가 늘어날수록 조국변영의 활로가 더 빨리 열린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혁과 새로운 변화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 가야 할 때라고 피력
 - “온 사회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는 우리모두의 숨결이고 지향이며 혁명의 엄숙한 부름”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 **경애하시는 총비서동지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면 무조건, 반드시 된다**
(노동신문, 2021.11.23.)

- 11월 23일 노동신문은 시련과 난관에서도 성과를 이루고 전진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 송신·송화지구, 삼지연시, 검덕지구,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을 사례로 들며 “엄혹한시련의 시기이지만 줄기찬 전진과 변혁의 실제적인 모습”을 목격하며 긍지와 자부심이 인민의 고유한 감정과 정서가 되었다고 설명
 - 또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결심하시고 구상하시면 무조건, 반드시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내다보는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조이고 역적의 신념”이라고 피력
 -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을 도약시키려면 공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반드시 수행해나갈 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장엄한 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 **당의 위대성을 신념화한 인민의 힘은 불가항력이다 (노동신문, 2021.11.27.)**

- 11월 27일 노동신문은 당의 위대성이 절대불변의 확고한 신념임을 강조하는 개인 필명의 논설을 게재함.
 - 논설은 전체 당원과 인민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의에 넘쳐나고 있으며, 혁명하는 인민에게 중요한 것은 “당의 위대성에 굳은 확신을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신념만이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며 오늘의 엄혹한 시련을 도약기로 전환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당중앙과 일심동체가 되고 당중앙의 사상과 지시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할 때 온 나라가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고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은 천백배로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따라배우자 (노동신문, 2021.11.29.)**

- 11월 29일 노동신문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 육성에 힘써야한다는 기사를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합니다”라고 발언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강대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후대사랑과 미래사랑의 후대관이 있다고 강조
 - 지난 10년 동안 옥류아동병원, 자연박물관, 전국의 애육원과 육아원 등이 건설되는 등 어린이들이 누구보다 많은 행복을 받고 자라났는데,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연속”에서의 투쟁이었다고 평가
 - 오늘의 난관을 헤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이 총비서의 숭고한 후대관을 따라 배우며 실천하는 참된 인간, 열렬한 혁명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가시밭도 웃으며 헤치고 힘에 부치도록 만짐을 지자”고 피력

〈대남·대외〉

■ 재침의 길로 질주하는 평화파괴의 주범 (조선중앙통신, 2021.11.25.)

- 11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기사다 수상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함.
 - 논평은 일본이 현행헌법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방위성도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를 논의하는 《방위력 강화가속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대륙침략전쟁준비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고 《전수방위》를 초월하여 선제공격능력을 갖추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책동”이라고 비난
 - 일본은 국제 및 국내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체 금할 의무를 지니지만 패전에 대한 양심을 품고 현행법과 국제조약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는데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선제공격능력까지 갖추는 경우 그것은 전쟁국가에로의 변신 다시말하여 세기를 이어온 재침준비를 마무리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
 - 또한 일본이야말로 평화파괴의 주범이며, “군국주의 일본이 노리는 첫째가는 재침대상은 다름아닌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국화, 군사대국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대립은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노동신문, 2021.11.27.)

- 11월 27일 노동신문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함.
 - 현재 서방은 자본주의를 “물질적번영과 현대문명의 본보기라는 미사려구”를 통해 미화하고 있지만 치명적 병폐와 내부 모순은 가릴 수 없다고 주장
 - 개인주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 돈의 노예로 만들고, 이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는 남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반동적 지배계급의 사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의 빈궁화와 도덕적부패”는 최악의 지경이라고 언급
 - 서로 물고뜯는 것이 생존방식이 되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관계에 자본주의의 반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폐들과 사회적모순들은 개인주의가 낳은 악성종양과 같은것으로서 자본주의제도자체를 변혁하지않는 한 절대로 해소될 수 없”으며, 무덤으로 가는 노상에 있어 자본주의의 운명을 되돌려 세울 수 없다고 설명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